

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THIS WEEK POINT

적응이 방어 비용에서 자산군으로 옮겨 앉았다. 한 글로벌 지수 제공사가 낸 지속가능 인프라 보고서는 앞으로 자본을 빨아들일 구조적 흐름을 넷으로 정리했는데,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인프라 옆에 기후 적응과 순환경제가 나란히 들어갔다. 감축의 결다리로 취급되던 적응이 장기 자산배분의 축으로 올라선 것이다. 같은 주 재해채권 시장은 6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기후 적응만 따로 다루는 감독 페이지를 열었으며, 네덜란드의 한 대형은행은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1도마다 노동생산성이 2%씩 깎여 30도에서는 10%가 사라진다는 계산과 함께 적응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사에 자리를 내준다고 경고했다. 이 논리가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설계에 닿기까지는 18~30개월로 본다.

환경 주장을 판정하는 자리가 금융감독에서 광고심의와 소비자기구로 내려왔다. 네덜란드 광고심의위원회는 타타스틸의 녹색강 광고에 제기된 네 개 항목 전부에서 회사가 졌다고 판단했다. 2030년 40% 감축, 2045년 탄소중립, 녹색수소를 쓴 깨끗한 공장이라는 주장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의 지적을 받은 한 크루즈 판매사는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크루즈 같은 표현을 웹사이트에서 통째로 지웠고, 9월에는 근거 없는 포괄적 환경 표현을 유럽연합 전역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지침이 발효된다. 수출 기업에게는 시차가 없고, 국내 표시광고 기준에 닿기까지는 12~18개월이다.

무엇을 중대하다고 부르는가가 조용히 바뀌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조사에서 국내주식 패시브 운용사 전원이 중대하다고 답한 항목에 올해 자본효율과 소수주주 보호가 새로 들어갔다. 기후변화·생물다양성·인권과 지역사회·공급망·다양성·정보공개 옆에 자본 배분의 언어가 붙은 것이다. 미국의 한 대형은행은 1조 달러 지속가능금융 목표의 정의를 넓혀 원자력과 자연기반 해법,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데이터센터를 담당할 새 팀의 실적까지 목표에 계상하기로 했고, 같은 주 세계 최대 운용사는 자사 지속가능 인프라 펀드의 등급을 스스로 내렸다. 국내 연기금과 은행의 분류 문서에 닿기까지는 6~12개월로 본다.



심층 — 이번 호를 관통하는 한 문장: 이번 주에 바뀐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판정하는 자리다

이번 호에 모인 자료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지만 하나의 이동을 공유한다. 무엇이 참인가를 정하던 자리가 옮겨 앉고 있다는 것이다. 적응의 값은 학계와 정부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재해채권 스프레드와 은행의 산업별 생산성 추정이 매기기 시작했고, 녹색강이 정말 녹색인지는 환경 당국이 아니라 광고심의위원회가 판정했으며, 무엇이 중대한 환경·사회 과제인지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위탁운용사 설문이 답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규칙이 같은지 아닌지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채권 인증기관의 시범사업이 정하기로 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목표를 세운 유엔이 아니라 통계기구와 국제 비영리 네트워크가 만든 지표가 판정한다.

이 이동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다. 새 판정자는 모두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광고심의위원회가 타타스틸을 이긴 근거는 환경 이념이 아니라 녹색수소의 조달 시점, 허가와 보조금의 확정 여부, 바이오메탄 시장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였다. 재해채권이 자산군으로 인정받은 근거도 기후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이 관측 가능하고 모델에 들어간다는 성질이다. 반대로 판정석에서 밀려나는 쪽에도 공통점이 있다. 선언을 모으고 정의를 제시하던 자발적 연합들이다. 지난 호에서 유엔 넷제로 캠페인이 독립 운영을 접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흐름은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이 지속가능 금융인지를 은행이 스스로 다시 정의했고, 무엇이 중대한 과제인지를 연기금이 운용사에게 물어 확인했다.

이 이동을 읽을 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다. 판정석이 옮겨 앉는다는 것이 곧 기준이 느슨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주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더 엄격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목표를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표의 전제를 증명하라고 했고, 연기금은 항목을 줄인 것이 아니라 자본 배분의 언어까지 끌어들여 늘렸으며, 담수 지표는 물이 나빠졌다는 진술을 서른일곱 개의 반증 가능한 명제로 바꿨다. 엄격해진 것은 요구의 강도가 아니라 요구의 형식이다.

종전에는 얼마나 야심적인가를 물었고 지금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차이가 국내 조직에 주는 부담은 방향이 반대다. 야심을 겨루는 국면에서는 선언문을 잘 쓰는 조직이 유리했지만, 확인 가능성을 겨루는 국면에서는 자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조직이 유리하다. 그리고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므로, 지금 무엇을 기록하기 시작하는가가 몇 년 뒤의 발언권을 정한다. 이번 호의 여덟 꼭지에서 반복해 권한 실행 항목이 대체로 새 사업이 아니라 새 기록인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 실무자에게 이 이동이 갖는 뜻은 분명하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임팩트 영역에서 가장 큰 힘은 목표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셈법을 소유한 자리**에 생긴다. 국내 조직 대부분은 아직 남이 만든 셈법에 자기 활동을 끼워 넣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지표가 바뀔 때마다 사업을 고쳐야 한다. 이번 호의 한국 꼭지가 숫자 밖의 변화를 재는 방법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기 영역의 무엇을 성과로 볼지 스스로 정의해 본 조직만이, 남의 지표가 바뀔 때 자기 활동이 아니라 그 지표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적응이 값을 갖기 시작했다 — 방어 비용에서 자산군으로

한 글로벌 지수 제공사가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 논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장기 자산배분을 끌어당길 구조적 흐름 넷을 제시했다. 첫째가 에너지 전환이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약 4,600기가와트 늘어나는데 이는 직전 5년의 두 배이고 그중 약 80%가 태양광이다. 둘째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다.

국제에너지기구 추정으로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력은 2024년 약 460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1,000테라와트시를 넘고 2035년에는 1,300테라와트시를 넘어선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이야기다. 주목할 것은 셋째와 넷째다. 기후 적응과 순환경제가 앞의 둘과 같은 층위의 투자 수요로 올라왔다. 보고서의 논지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탈탄소를 재정 지원하는 일이 아니라, 더 회복력 있고 더 디지털화된 저배출 경제를 지탱할 설비를 짓고 갈아 끼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같은 주 이탈리아 금융 매체가 전한 재해채권 시장의 그림이 이 논지에 실물을 붙인다. 자연재해 위험을 채권 형태로 기관투자자에게 넘기는 이 시장은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성장의 동력은 기후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보험 인수 능력 부족이다. 지켜야 할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재건 비용이 뛰고, 재해에 노출된 지역에 부가 집중되면서 보험 산업의 자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자산의 매력은 손실이 경제 충격이 아니라 특정 자연재해에서 나온다는 점, 변동금리 구조라 금리 움직임에 덜 민감하다는 점이다.

계절성도 뚜렷하다. 7월에서 10월에 몰린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신규 발행과 스프레드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큰 재해 뒤의 가격 재조정을 노려 현금을 남겨 둔다. 다만 이 시장을 설명할 때 반드시 붙는 조건이 있다. 스위스리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연재해 손실이 커지는 주된 원인은 기후 그 자체보다 경제성장, 위험지역의 자산 축적, 도시화, 취약 지역의 인구 증가다. 다시 말해 이 값들은 재해 모델에 넣을 수 있는 변수들이고, 그래서 값이 매겨진다.

감독기관도 자리를 옮겼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이달 기후 적응을 별도로 다루는 페이지를 열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의 기후 항목이 대체로 배출 공시와 전환계획에 몰려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응이 독립된 감독 항목으로 세워진 것 자체가 사건이다. 실물 쪽 계산은 네덜란드에서 나왔다. 한 대형은행이 극한 기상의 경제적 결과를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는 지금의 폭염과 가뭄 다음에 올 가을 침수를 함께 대비하지 않는 기업은 직접 피해뿐 아니라 준비한 경쟁사에게 자리를 내준다고 결론지었다. 숫자가 구체적이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1도가 오를 때마다 노동생산성이 2%씩 떨어지고, 30도에서는 10%가 사라진다.

야외에서 일하거나 힘을 많이 쓰거나 단열이 나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타격이 더 크다. 내륙 수운으로 원료를 받는 사료 제조사나 건설사는 공급 지연을 겪고, 하천 수온이 오르면 냉각수를 끌어다 쓰고 되돌려 보내는 것이 금지돼 생산 자체가 제한된다. 은행이 짙은 대응 수단은 셋이다. 설비와 부지의 기후 적응 개조, 보험, 그리고 단체협약이다. 이 세 번째가 흥미롭다. 네덜란드 건설·인프라 부문에는 작업 불가 기상에 관한 별도 단체협약이 있는데, 추워서 일할 수 없는 경우만 규정하고 더워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비어 있다. 조항이 있으면 고용보험 기관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항이 없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보수적인 투자 성향과 전력망 혼잡이 적응의 문턱을 높인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 시사점 — 국내에서 적응은 아직 재난 대응 예산 항목이지 자본시장 상품이 아니다. 이 간극이 만드는 실무 과제는 네 가지다. 첫째, 온도와 생산성의 관계를 자기 사업장 숫자로 계산해 보는 일이다. 25도 초과 1도당 2%라는 계수를 자사의 근무 시간대별 기온 분포와 야외·실내 인력 구성에 대입하면 지난여름 손실의 근사치가 오늘 나온다. 이 계산은 예산도 승인도 필요 없고, 그 숫자가 나와야 적응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지출이 된다. 둘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폭염 조항이다. 국내 산업안전 규칙에는 온열질환 예방 의무가 있지만 작업을 멈춘 시간을 누가 부담하는가는 대체로 비어 있다. 네덜란드가 추위 조항만 갖고 있어 곤란해진 것과 정확히 같은 자리다.

셋째, 보험이다. 손실을 사후 실사로 정산하는 방식은 폭염처럼 피해가 넓고 얇게 퍼지는 재해에 잘 맞지 않는다. 기상 관측값이 기준을 넘으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논의를 지금 시작해 두는 편이 낫다. 넷째, 자산 쪽이다. 적응 설비는 감축 설비와 달리 배출 감축량으로 성과를 증명할 수 없어서 녹색 라벨을 붙이기 어렵다. 도쿄가 기후 적응과 회복력 사업을 위해 3억 3,000만 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이미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공기업은 적응 사업의 자금 조달 구조를 지금 설계해 두면 라벨 논쟁을 건너뛸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적응이 별도 상품군으로 서기까지는 18~30개월로 보지만, 앞의 두 항목은 이번 분기의 일이다.



심층 — ① 왜 중요한가 ② 승자와 패자 ③ 한국 적용 ④ 함정

① **왜 중요한가.** 감축과 적응은 회계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감축의 성과는 하지 않았더라면 나왔을 배출과의 비교로만 존재하고, 그래서 회피 배출량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반면 적응의 성과는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줄인 값이다. 폭염으로 생산이 멈춘 시간, 침수로 못 판 물량, 냉각수 제한으로 낮춘 가동률은 전부 관측된다. 관측되는 순간 이것은 보험료가 되고, 보험료가 되면 채권이 되고, 채권이 되면 자산배분의 한 칸이 된다.

이번 주 자료들이 알려주는 것은 그 조립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수 제공사는 적응을 장기 배분의 축으로 세웠고, 재해채권 시장은 600억 달러라는 규모로 그 축을 지탱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은 별도 항목을 만들었고, 상업은행은 산업별 손실 계수를 공표했다. 이 넷이 갖춰지면 상품이 나온다. 임팩트 자본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결정적이다. 지난 10년간 임팩트

투자의 난제는 사회·환경 성과와 재무 성과를 잇는 다리가 약하다는 것이었는데, 적응은 그 다리가 원래부터 붙어 있는 드문 영역이다.

② **승자와 패자.** 승자는 셋으로 갈린다. 첫째는 위험을 인수하고 되파는 쪽이다. 재보험사, 지수형 보험 설계자, 재해 모델링 회사가 여기 속한다. 둘째는 적응 설비를 짓는 쪽이다. 배수와 차수 인프라, 냉방과 단열, 수자원 재이용, 전력망 보강이다. 셋째는 값을 매기는 데이터를 파는 쪽이다. 지역 단위 기상 위험 데이터와 자산 단위 취약성 평가는 지금 가장 빠르게 값이 오르는 정보다. 패자는 덜 분명하지만 더 중요하다. 적응 비용을 자본지출로 세울 수 없는 조직이 먼저 밀린다.

야외 노동 비중이 높고 마진이 얇은 농업·건설·물류의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냉방 개선이 곧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임차 사업장이다. 네덜란드 은행이 중소기업의 보수적 투자 성향을 제약으로 짚은 것이 이 지점이다. 애매한 자리에 공적 재난보험이 있다. 민간이 값을 매길 수 있는 위험을 골라 가져가면, 공적 부문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위험만 남는다. 그러면 공적 재정의 부담은 커지는데 그 부담은 통계에 기후 손실이 아니라 재정 적자로 기록된다.

③ **한국 적용.** 다섯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업 단위의 온도와 생산성 곡선 산출이다. 오늘 시작할 수 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둘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폭염 조항 신설이다. 여름이 끝난 지금이 노사 협의 일정상 가장 유리한 시점이다. 셋째, 지수형 보험의 시범 설계다. 농협·수협·지자체가 이미 재해보험 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새 제도가 아니라 산정 방식의 추가로 접근하는 편이 빠르다.

넷째,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적응 채권이다. 감축 사업이 아니라 배수·저류·녹지·냉방쉼터 같은 적응 자산을 묶어 조달 구조를 만들면, 녹색 라벨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미뤄 온 사업이 움직인다. 다섯째, 임팩트 투자기관의 새 대상군이다. 적응 영역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출과 재무 위험이 겹치는 자리라 임팩트와 수익을 동시에 설명하기 쉬운데, 국내 임팩트 펀드 대부분은 아직 이 영역에 투자 논거를 갖고 있지 않다.

④ **함정.**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적응은 사유화되기 쉽다. 각자 자기 자산만 지키면 물은 옆으로 흐르고 열은 옆으로 밀린다. 제방을 높인 공장 옆의 마을이 대신 잠기는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는데, 이 옮겨간 위험은 어느 기업의 회계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임팩트 관점에서 적응 투자를 볼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 투자가 위험을 줄였는가 옮겼는가다. 둘째, 값이 오르는 이유를 오독하면 안 된다. 스위스리 연구소의 지적처럼 재해 손실 증가의 상당 부분은 기후가 아니라 위험지역에 자산을 더 쌓아 올린 결과다. 재해채권 시장이 커지는 것은 적응이 잘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노출이 커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셋째, 예산의 대체 효과다. 적응은 성과가 즉시 보이고 감축은 성과가 늦게 보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된 조직에서 적응이 감축을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

두 예산의 출처를 처음부터 분리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감축 계획이 조용히 비어 있게 된다. 다섯째로 하나 더 덧붙이면, 적응을 재난 대응 조직이 전담하게 두는 배치다. 적응 투자의 회수는 재난이 나지 않은 해에도 발생한다. 폭염에 생산성이 덜 떨어지고 냉방비가 덜 들고 보험료가 덜 오르는 형태로 매년 조금씩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회수분은 안전관리 부서의 성과표에는 잡히지 않고 생산·재무 부서의 손익에 흩어져 기록된다. 그 결과 적응 투자는 비용을 내는 부서와

편익을 받는 부서가 갈라진 전형적인 사내 배분 문제가 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런 사업은 예산 심의의 마지막 줄로 밀린다. 처음부터 편익을 생산·재무 지표로 잡아 두고 그 계산을 재무 부서가 검증하게 만드는 조직만이 이 함정을 피한다.

출처: ESG News (이탈리아, 2026-08) — [AI, clima e transizione: perché le infrastrutture sono la nuova frontiera degli investimenti](#) · ESG News (이탈리아, 2026-08) — [Cat Bond, una diversificazione che non guarda ai mercati, ma ai rischi del mondo reale](#) ·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08) — [ESG Round-up: FCA launches climate adaptation web page](#)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08) — [ABN AMRO waarschuwt: Nederlandse bedrijven moeten zich voorbereiden op extreem weer](#)

녹색인지 아닌지를 광고심의위원회가 판정했다 — 환경 주장의 심판석이 내려 온다

네덜란드 광고심의위원회가 타타스틸의 지속가능성 광고를 두고 회사가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두 시민단체가 제기한 네 개 항목 전부에서 회사가 졌다. 회사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줄이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이 되며 녹색수소를 써서 녹색강을 생산하겠다고 광고해 왔는데, 심의위원회는 이 약속들이 현실적이거나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판단의 근거가 이념이 아니라 사실관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녹색수소가 제때 공급될 것인지, 필요한 허가과 수십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이 확정될 것인지, 바이오메탄을 살 시장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 이 결정적 불확실성들을 회사가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 공장을 깨끗하다고 부른 것도 오도로 판정했다. 건설과 부설 단계에서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오히려 늘고 유해한 제강 슬래그도 더 나오며, 필요한 액화천연가스를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기후에 석탄만큼 나쁘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회사는 이것이 확정된 주장이 아니라 목표에 가깝다는 취지로 방어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속가능성 목표를 밝히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렇다면 그 목표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기업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같은 달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 장면이 나왔다. 소비자시장청이 한 크루즈 판매사에게 근거 없는 지속가능성 표현을 지적하자, 회사는 책임 있는 여행, 지속가능한 크루즈, 환경친화적 여행 같은 표현을 웹사이트의 글과 이미지에서 모두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크루즈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크루즈와 환경으로 바꿨다. 소비자단체가 녹색 여행상품 판매자들을 다룬 기사를 낸 것이 이 조치의 발단이었다. 감독기관은 제재 절차를 밟는 대신 회사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택했고 회사는 즉시 표현을 내렸다.

이 방식이 가능했던 배경에 9월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적용되는 새 소비자 지침이 있다. 지금도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환경 표현은 쉽게 오도로 판정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런 표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다. 의식 있는,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같은 말이 환경 측면에서든 사회 측면에서든 근거 없이 쓰이면 안 된다. 인증 라벨에도 조건이 붙는다. 독립된 기관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라벨은 쓸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장면은 판정의 어려움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일본의 지속가능성 전문 매체가 정리한 워터포지티브 실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 회계연도에 전 세계에서 1,40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물을 되돌려 처음으로 취수량을 넘어섰다고 발표하면서도, 전 세계 합계가 취수량을 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실제로 사업을 벌이는 유역에서 취수량을 넘는 물을 회복하는 쪽으로 중심을 옮기겠다고 스스로 밝혔다. 구글은 2025년 약 2,900만 세제곱미터를 되돌렸고 97개 유역 165건으로 사업을 늘렸으며 이는 그해 담수 소비량의 78%에 해당한다.

메타는 2030년까지 사업 유역에서 소비량을 넘는 물을 회복하되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은 200%, 중간인 지역은 100%로 목표를 나눴고, 지원하는 사업이 자사가 쓰는 수원과 수문학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과 되돌린 양을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워터포지티브라는 말에 국제 표준도 인증 제도도 없다는 점이다. 어떤 기업은 취수량을, 어떤 기업은 소비량을 기준으로 삼고, 되돌리는 곳도 전 세계 합계인지 사업 유역인지 물 부족 유역인지 제각각이다. 같은 100% 회복이라도 분모와 대상 시설과 지리적 범위가 다르면 뜻과 난이도가 달라진다. 게다가 한 사업을 여러 기업이 함께 지원하면서 각자 전체 회복량을 자기 성과로 계상하면 같은 편익이 중복으로 주장된다.

한국 시사점 — 국내 기업의 환경 표현은 아직 대체로 홍보팀과 법무팀 사이에서 정리된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자리에 표시광고 규율과 소비자 분쟁 절차가 들어온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 과제는 다섯이다. 첫째, 유럽 시장에 파는 기업은 9월이 마감이다. 제품 포장·웹사이트·전시 부스에 쓴 포괄 표현을 전수 점검하고, 특히 탄소상쇄를 근거로 한 기후중립 표기와 자체 제작 라벨은 즉시 정리 대상이다. 둘째, 미래 목표를 광고에 쓰는 관행을 다시 봐야 한다. 타타스틸이 진 지점은 목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목표의 실현 조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었다. 국내 기업의 2030년·2050년 선언 대부분은 전제 조건이 문서로 정리돼 있지 않다. 셋째, 그 전제 조건을 문서로 만드는 일은 오늘 시작할 수 있다.

감축 목표를 떠받치는 외부 조건 — 재생전력 조달 가능성, 인허가 일정, 원료 시장의 존재, 보조금 확정 여부 — 을 한 장에 적고 각 항목의 확정도를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 넷째, 물 관련 표현은 배출보다 훨씬 위험하다. 배출은 어디서 줄이든 총량으로 셈이 맞지만 물은 유역이 다르면 셈이 맞지 않는다. 국내 기업이 해외 유역 사업으로 물 성과를 주장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다섯째, 인증 라벨의 자체 제작을 멈춰야 한다. 국내 기업·협회가 만든 자체 마크는 유럽 기준에서 사용 금지 대상이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에서도 신뢰를 잃는다. 이 규율이 국내 표시광고 심사 기준의 초안에 닿기까지는 12~18개월, 실제 제재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24~36개월로 본다.



심층 — ① 왜 중요한가 ② 승자와 패자 ③ 한국 적용 ④ 함정

①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환경 주장의 진위는 세 곳에서 다뤄졌다. 규제기관의 공시 심사, 소송, 그리고 평가사의 등급이다. 셋 다 느리고 비싸며 일반 소비자와 멀다. 이번 주 자료들은 네 번째 자리가 열렸음을 보여준다. 광고심의와 소비자보호다. 이 자리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빠르다.

크루즈 사례에서 감독기관은 제재 절차 없이 지적 한 번으로 표현을 내리게 했다. 둘째, 문턱이 낮다. 시민단체가 광고 하나를 걸고 대형 철강회사를 이겼다.

셋째, 판정 기준이 배출량이 아니라 입증 가능성이다. 목표가 야심적인지가 아니라 목표의 전제가 확인됐는지를 묻는다. 임팩트 자본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투자 대상 기업의 위험 구조를 바꾼다. 종전에는 그린워싱 위험이 공시 위반과 소송 두 갈래였는데, 이제는 광고 하나로 브랜드와 정책 정당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타타스틸 사례에서 시민단체가 곧바로 20억 유로의 정부 지원이 정당한지를 물은 것이 그 증거다.

② 승자와 패자. 승자는 세 종류다. 첫째, 주장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 온 기업이다. 메타의 물 목표가 그 예다. 유역 단위, 물 스트레스 등급별 차등, 수문학적 연결성 요구, 제3자 검증이라는 네 조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했지만 판정척이 내려온 순간 자산이 된다. 둘째, 검증 서비스 산업이다. 라벨의 독립 인증 요건이 법으로 들어오면 인증기관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 셋째,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다. 이들은 이제 소송 비용 없이 판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다. 패자는 두 종류다. 첫째, 전환 계획이 외부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중공업이다.

녹색수소·바이오메탄·재생전력 조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축 목표를 대외 홍보에 써 온 기업은 그 홍보가 곧 증거가 된다. 둘째, 자체 라벨을 마케팅 자산으로 키워 온 유통과 소비재다. 흥미로운 것은 네 번째 판정자가 하나 더 늘고 있다는 점인데, 인공지능 도구의 추천이다. 스페인의 한 조사는 다섯 개 생성형 도구에 지속가능성 관련 질문 스무 개를 던져 브랜드 언급 점유율을 켜는데, 전기·하이브리드차에서는 토요타가 20.4%, 재생에너지 공급사에서는 옥토퍼스에너지가 13.5%, 자연주의 화장품에서는 벨레다가 11.1%, 지속가능 패션에서는 에코알프가 10.8%로 1위였다. 광고심의회가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를 정한다면, 추천 알고리즘은 무엇이 먼저 보이는지를 정한다.

③ 한국 적용. 국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순서가 분명하다. 첫 달에는 표현 전수 조사를 한다. 제품·웹·전시·보도자료에 쓰인 포괄 환경 표현과 자체 라벨을 목록으로 만든다. 둘째 달에는 각 표현의 근거 문서를 대응시킨다. 근거가 없는 표현은 그 자리에서 내린다. 셋째 달에는 감축·순환·물 목표의 전제 조건표를 만든다. 이 표는 대외 공개용이 아니라 내부 판단용이며, 표가 있는 조직은 광고 심의회든 투자자 질의든 같은 답을 내놓을 수 있다.

그 다음이 물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데이터센터 등 국내 주력 산업은 물 사용량이 크고, 앞으로 물 관련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정해 둘 것은 두 가지다. 기준을 취수량으로 할지 소비량으로 할지, 그리고 회복 사업을 취수 유역 안에서 할지 밖에서 할지다. 이 둘을 먼저 정하지 않고 사업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계산 근거를 통째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④ 함정. 첫째, 표현을 지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크루즈 사례에서 회사가 지운 것은 표현이지 배출이 아니다. 표현만 정리하는 대응이 반복되면 조직 안에서 지속가능성 부서의 권한이 홍보 검열로 축소된다. 둘째, 라벨 규제가 소기업에 더 아프다는 점이다. 독립 인증을 받는 비용은 매출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실제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인증 비용을 못 내는 소규모 생산자가 먼저 표현을 잃는다. 지난 호에서 다룬 인증 문턱 상승과 같은 구조가 여기서도 반복된다. 셋째, 중복 계상이다. 물 회복 사업에서 여러 후원 기업이 같은 편익을

각자 자기 성과로 세는 문제는 탄소 크레딧이 이미 겪은 병이다. 국내 기업이 공동 사업에 참여할 때 지분에 따른 성과 배분과 계상 기간을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검증 단계에서 성과가 통째로 부인된다.

넷째, 검증의 외주화다. 표현을 심사하는 절차가 생기면 많은 조직이 그것을 외부 자문사에 맡기는데, 자문사는 문구가 규정에 걸리는지를 보지 자사의 감축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보지 않는다. 타타스틸이 진 자리는 문구가 아니라 계획의 전제였다. 그러므로 이 절차는 홍보나 법무가 아니라 실제 설비 투자 일정을 쥐고 있는 부서가 함께 앉아야 작동한다. 다섯째, 인공지능 추천에 대한 과잉 반응이다. 브랜드 언급 점유율이 새 지표로 등장하면 곧 그 점유율을 올리는 기법 시장이 생기는데, 검색 최적화가 밟아 온 길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유효한 대응은 점유율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자사의 환경 주장을 기계가 인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화된 근거로 공개해 두는 일이다.

출처: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08\)](#) — [Reclame Code Commissie: Tata Steel misleidt publiek met groen staal plan](#)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08\)](#) — [Cruiseaanbieder Captain Cruise past duurzaamheidsclaims aan na actie ACM](#)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ウォーターポジティブの現在地 ～水還元における流域の一致と環境主張の在り方～](#) · [IPMARK \(스페인, 2026-08\)](#) — [Toyota, Weleda y Ecoalf lideran las consultas a la IA relacionadas con la sostenibilidad](#)

무엇을 중대하다 부르고 무엇을 지속가능으로 셈하나 — 정의가 목표를 만든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이 위탁운용사들에게 무엇을 중대한 환경·사회 과제로 보는지 묻은 결과를 8월 12일 공개했다. 국내주식 패시브 운용에서는 모든 운용사가 여덟 항목을 중대하다고 답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과 지역사회, 자본효율, 소수주주 보호, 공급망, 다양성, 정보공개다. 작년과 비교하면 변화가 분명하다. 지난해 전원 일치 항목은 기후변화·생물다양성·인권과 지역사회·공급망·다양성·정보공개였고, 올해 자본효율과 소수주주 보호가 새로 100%에 들어왔다. 소수주주 보호 항목의 괄호 안에는 정책보유 주식 예시로 붙어 있다.

다른 항목에서도 중대하다고 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액티브 운용에서는 전원 일치 항목이 없었지만 기후변화가 93%, 자본효율과 기업지배구조가 87%, 이사회 구성·평가와 다양성이 80%로 높았다. 채권 운용에서는 기후변화만 전원 일치였고 생물다양성·인권과 지역사회·정보공개가 80%를 넘었다. 이 연기금은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활동의 방향을 밝히면서 재무적 중대성 관점에서 기업의 기회 추구하고 위험 저감, 정보공개를 운용사가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중점 사항으로 삼았고, 이번 조사에서 중대하다고 보는 과제가 크게 바뀐 운용사에 대해서는 평가 때 그 배경과 관여 활동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정의를 넓히는 쪽의 움직임이 나왔다. 한 대형은행이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지속가능 금융에 투입하겠다는 목표의 진척을 보고하면서, 지금까지 6,500억 달러 가까이를 배정했고 2025년 한 해에만 913억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비율로 보면 같은 시기 비슷한 약속을 한 더 큰 두 경쟁 은행보다 앞서 있다.

한 곳은 1조 달러 목표의 3분의 1에 못 미쳤고, 다른 한 곳은 1조 5,000억 달러 목표의 절반 정도였다. 그런데 진척의 상당 부분은 정의를 다시 그린 결과이기도 하다. 이 은행은 2025년 12월 녹색·사회·저렴주택으로 나뉘어 있던 프레임워크를 하나로 통합했는데, 사업들이 서로 겹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통합 과정에서 지속가능 금융의 해석이 넓어져 원자력과 자연기반 해법이 들어왔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새 인공지능 인프라 बैं킹 팀의 실적도 목표에 계상된다. 2025년 집행액 중 재생에너지가 20%인 184억 달러로 가장 컸고 지속가능 교통이 11%인 103억 달러였으며, 저렴한주택과 경제적 포용에 73억 달러가 들어갔다. 도쿄가 기후 적응과 회복력 사업을 위해 발행한 3억 3,000만 달러 채권의 주선도 이 목표에 포함됐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은행이 어떤 기술과 산업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금융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와 사업 전체가 에너지 전환에 정렬돼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주 반대 방향의 조정도 있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자사 지속가능 인프라 펀드의 등급을 내렸다. 같은 소식지에 함께 실린 다른 소식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올 상반기 주주총회의 43%에서 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 사안을 제기했고, 한 국제 벤치마크 기관은 흩어져 있던 여러 평가 체계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합치겠다고 밝혔다. 목록을 늘리는 국면이 끝나고 목록을 정리하는 국면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한국 시사점 — 세 자료가 국내 실무에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 조직의 중대성 목록은 누가 정했고 언제 바뀌었는가. 첫째, 연금조사에서 자본효율과 소수주주 보호가 새로 전원 일치 항목이 된 것은 국내 기업에 직접 날아드는 요구가 아니라 순서의 예고다. 지배구조와 자본 배분이 환경·사회 항목과 같은 표에 올라가면, 다음 단계는 그 항목이 스튜어드십 평가와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되는 일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를 다루는 실무자라면 지금이 자기 표를 비교해 볼 시점이다. 둘째, 정책보유 주식이 소수주주 보호의 예시로 붙은 대목은 국내 지배구조 논의와 정확히 겹친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대체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별도 의제로 다뤄지는데, 해외에서는 그것이 중대성 목록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셋째, 은행의 정의 확장은 국내 금융권이 곧 마주할 문제다. 국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대규모 지속가능 금융 목표를 발표해 두었는데,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자력을 포함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앞으로 1~2년 안에 반드시 온다. 지금 정해 둘 것은 포함 여부 자체가 아니라 포함할 경우 무엇을 함께 공개할 것인가다. 정의를 넓히면서 종전 기준의 수치를 함께 병기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성과가 아니라 회계 처리로 읽힌다. 넷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자사 지속가능 금융 실적표에 정의 변경 이력을 한 줄로 붙이는 것이다. 이 한 줄은 몇 년 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달성을 지켜 준다. 국내 문서에 이 논의가 닿기까지는 6~12개월로 본다.



심층 — ① 왜 중요한가 ② 승자와 패자 ③ 한국 적용 ④ 함정

① **왜 중요한가.** 중대성 목록과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겉보기에 문서 작업이지만 실제로는 자본 배분의 배관이다. 목록에 오른 항목만 운용사의 관여 대상이 되고, 정의에 든 자산만 목표 실적에

계상되며, 계상되는 자산에만 값이 붙는다. 이번 주 세 자료는 그 배관이 지금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기금 쪽에서는 지배구조와 자본효율이 환경·사회 항목과 같은 층위로 올라왔다.

이것은 환경 항목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재무적 중대성이라는 하나의 자로 전부를 다시 켜 결과다. 은행 쪽에서는 정의가 넓어졌다. 원자력과 자연기반 해법, 데이터센터가 지속가능 금융 안으로 들어오면 목표 달성률은 오르지만 그 목표가 뜻하는 바는 얇아진다. 운용사 쪽에서는 반대로 등급이 내려갔다. 세 방향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다들 자기 셈법을 자기 손으로 고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승자와 패자. 승자는 셈법을 소유한 조직이다. 자산 소유자, 대형 은행, 지수 제공사, 벤치마크 기관이다. 특히 여러 평가 체계를 하나로 합치겠다고 나선 벤치마크 기관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평가가 통합되면 기업의 대응 비용은 줄지만 평가 기관의 권한은 훨씬 커진다. 패자는 셋이다. 첫째, 목록에서 빠진 주제를 다루는 조직이다. 목록이 여덟 항목으로 정리되면 그 밖의 의제 — 예컨대 지역 고용의 질, 돌봄, 문화 접근성 — 는 논의 자체에서 사라진다.

둘째, 정의 확장의 반대편에 있는 사업들이다. 원자력과 데이터센터가 같은 목표 안에서 경쟁하면 규모가 작고 회수 기간이 긴 지역 재생에너지와 사회 인프라가 밀린다. 셋째, 정의 변경 이력을 남기지 않은 조직이다. 몇 년 뒤 목표 달성을 발표할 때 비교 가능한 과거 수치가 없으면, 달성 자체가 의심받는다. 애매한 자리에 중견기업이 있다. 목록이 늘면 대응 비용이 늘고 목록이 줄면 자기 강점이 사라진다.

③ 한국 적용. 네 갈래다. 첫째,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를 다루는 국내 기관은 자기 항목표와 해외 자산 소유자의 항목표를 나란히 놓고 비어 있는 칸을 확인하는 일부부터 한다. 자본효율과 소수주주 보호가 중대성 목록 안으로 들어온 것은 국내 논의 순서와 반대라서 특히 유용한 대조다. 둘째, 지속가능 금융 목표를 가진 국내 금융기관은 정의 변경 이력표를 지금 만든다.

이미 한 번 이상 정의를 손댄 곳이 대부분이고, 그 이력이 문서로 없으면 나중에 복원할 수 없다. 셋째, 임팩트 투자기관은 목록에서 빠진 주제를 자기 자리로 삼을 수 있다. 대형 자산 소유자의 목록이 여덟 항목으로 좁혀질수록, 그 밖의 사회 과제에 자본을 붙이는 일은 경쟁이 적어진다. 넷째, 기업의 지속가능 담당자는 자사 중대성 평가의 갱신 주기를 확인한다. 3년에 한 번 외부 컨설팅으로 갱신하는 방식은 목록이 매년 움직이는 국면에서 늦다.

④ 함정. 첫째, 목록의 확대를 진보로 읽는 오독이다. 항목이 늘었다는 것은 관심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재무적 중대성이라는 하나의 자로 모든 항목을 다시 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자에 걸리지 않는 사회 가치는 목록에 올라도 실제 관여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둘째, 정의 확장을 후퇴로만 읽는 오독이다. 원자력과 자연기반 해법을 넣은 것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말하기 어렵고, 문제는 넓은 정의로 계산한 값과 종전 정의로 계산한 값을 함께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셋째, 국내 조직이 흔히 빠지는 함정인데, 해외 목록을 그대로 번역해 자기 목록으로 삼는 일이다. 목록은 그 조직의 자산 구성과 수탁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제 관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넷째, 등급 강등을 실패로만 다루는 문화다.

운용사가 자기 펀드 등급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등급 체계가 작동하는데, 강등이 곧 문책이 되는 조직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다섯째, 목록을 조직도로 착각하는 일이다. 중대성 목록의 여덟 항목이 그대로 여덟 개 담당자에게 배정되면, 항목 사이의 상충 관계를 다루는 사람이 사라진다. 자본효율과 인권, 공급망과 다양성은 종종 같은 결정에서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그 충돌을 조정하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업무다. 목록을 받은 조직이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문서는 항목별 담당표가 아니라 항목 사이의 상충 사례 목록이다. 여섯째, 정의 확장의 시점 선택이다. 목표 달성이 임박한 시점에 정의를 넓히면 그 행위 자체가 신뢰 문제를 만든다. 넓힐 필요가 있다면 목표 기간의 초종반에, 그리고 반드시 종전 기준 수치와 함께 넓히는 것이 유일하게 방어 가능한 순서다.

출처: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GPIF, 「重大ESG課題」2026年版発表。気候変動トップ。生物多様性・ダイバーシティも高い・Trellis (국제, 2026-08) — Progress report: Citi's \$1 trillion 'sustainable finance' goal ·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08) — ESG round-up: BlackRock downgrades sustainable infrastructure fund

서로 다른 규칙을 같다고 인정하는 기술 — 다음 전선은 등가성이다

지속가능 금융의 다음 전선이 규칙의 내용이 아니라 규칙 사이의 호환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럽의 기관투자자 기후 연합이 유럽연합과 영국의 공시 제도를 더 촘촘히 호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두 제도가 각각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세부가 어긋나면 양쪽에 상장된 기업과 양쪽에 투자하는 기관은 같은 정보를 두 번 만들어야 한다. 같은 소식지에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이 금융권 탄소회계 파트너십의 관여 그룹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함께 실렸는데, 이것도 같은 방향이다. 기준을 만드는 쪽과 계산 방법을 만드는 쪽이 서로의 방에 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움직임은 분류체계다. 국제 채권 인증기관이 호주를 분류체계 등가성 방법론의 첫 시범 대상으로 골랐다. 지금 세계에는 유럽연합, 영국, 중국, 아세안, 호주 등 스무 개가 넘는 녹색 분류체계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어떤 활동이 한 나라 분류체계에서 녹색이면 다른 나라 분류체계에서도 녹색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이 질문에 답하는 방법론이 만들어지면 발행자는 나라마다 다른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는 국경을 넘는 비교가 가능해진다. 같은 기관은 최근 1,000번째 인증 발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평가받는 자와 평가하는 자의 자리가 겹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금융시장 감독기구가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냈다.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감독하고, 지속가능성 인증을 맡은 감사인의 업무를 검증하며, 지속가능성 특성을 내건 금융상품의 정보가 명확하고 오도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기구의 일이다. 그런 기구가 자기 조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영향을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맞춰 정리해 내놓았다. 인증 재생전력을 조달해 간접 배출을 없앴고, 로마와 밀라노 사무소의 조명을 발광다이오드로 바꾸고 공조 설비를 최적화했으며 야간 소비를 줄였다.

남은 배출의 대부분은 직원 이동과 가치사슬에서 나오는 기타 배출이며 이것이 앞으로 줄여야 할 주된 영역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네 번째 축은 국가 단위 평가다. 한 유럽 운용사의 국가별 지속가능성 순위에서 덴마크가 최근 2년간 네 번 연속 1위를 지켰고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가 상위 다섯을 채웠다. 그런데

상위권의 성적 자체는 좋지 않았다. 대부분 환경 점수가 떨어졌고, 덴마크와 스웨덴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둔화했으며 노르웨이는 물 스트레스 관리와 기후 위험에서 후퇴했다.

2위 핀란드만 환경 점수가 소폭 올랐다. 큰 국제 발행국들의 점수는 계속 갈렸다. 일본은 9점 만점에 7.46으로 소폭 하락했는데 기후와 에너지 항목의 악화가 원인이었고, 미국은 6.61로 대체로 유지됐다. 미국의 사정이 역설적이다. 부패 수준이 높아지고 제도가 약해지면서 지배구조 점수가 떨어졌는데, 관세로 수입품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 환경 점수가 올라 상쇄됐다. 신흥국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물 관리 개선으로 절대 점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한국 시사점 — 한국은 이 전선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논의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고 녹색 분류체계도 이미 갖고 있어, 제도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등가성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다. 첫째, 국내 분류체계와 다른 나라 분류체계의 항목별 대조표가 공개된 형태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가성 방법론이 만들어질 때 대조표를 이미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협상 속도가 다르다. 둘째, 국내 기업 중 유럽과 한국 양쪽에서 공시 의무를 지는 곳은 지금 두 문서의 항목 차이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편이 좋다.

호환이 이뤄지면 그 목록이 곧 절감액이 되고, 이뤄지지 않으면 그 목록이 곧 이중 부담의 증거가 된다. 셋째, 국가 단위 평가 결과는 국채와 공공기관 채권의 조건에 영향을 준다. 물 관리 개선만으로 싱가포르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사실은 국내 정책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힌트다. 상위권 국가들조차 환경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의 둔화가 세계적 현상임을 뜻하고, 그렇다면 상대 평가에서는 물·생물다양성·순환 같은 항목의 개선이 순위를 더 크게 움직인다. 넷째, 감독기구의 자기 보고는 국내에도 곧 온다.

금융 감독기관과 공공기관이 자기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보고하기 시작하면 민간에 요구하는 기준의 설득력이 달라진다. 다섯째, 국내 임팩트 투자기관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성과 측정 도구 역시 지금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재단·공공기금·민간 펀드가 각자 다른 양식을 요구해 피투자 조직이 같은 성과를 서너 번 다르게 적는 일이 흔하다. 국가 사이의 분류체계 등가성 논의는 국내 임팩트 측정 양식들 사이의 상호 인정 논의로 그대로 옮겨 읽을 수 있고, 그 작업은 국제 협상과 달리 국내 몇몇 기관이 합의하면 곧바로 실행된다. 이 논의가 국내 공공 부문의 실무 문서에 닿기까지는 12~24개월로 본다.



심층 — ① 왜 중요한가 ② 승자와 패자 ③ 한국 적용 ④ 함정

① **왜 중요한가.** 규칙이 여러 개 생기면 반드시 다음 단계가 온다. 규칙 사이의 환율을 정하는 일이다. 무역에서 원산지 규정이 관세만큼 중요하듯, 지속가능 금융에서는 분류체계 등가성이 분류체계 자체만큼 중요해진다. 등가성이 인정되면 그 나라의 녹색 자산은 국경을 넘어 팔린다.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자산이 자국 안에서만 값을 받는다. 이번에 호주가 첫 시범 대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원 수출국이면서 유럽·아시아 양쪽에 자본시장이 열려 있고, 분류체계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 국제 기준과 구조가 가깝다. 공시 호환 요구도 같은 논리다. 유럽과 영국이 각자 기준을 만들면 양쪽에 걸친 기업은 비용을 두 번 내는데, 그 비용은 결국 자본비용으로 나타난다. 감독기구가 스스로 보고서를 낸 것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남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해 본 기관만이 그 기준의 실행 가능성을 논증할 수 있다.

② **승자와 패자.** 승자는 셋이다. 첫째, 제도를 국제 기준에 가깝게 설계한 나라다. 등가성 판정은 결국 구조 비교이고, 구조가 다르면 아무리 엄격해도 인정이 어렵다. 둘째, 인증기관과 검증 산업이다. 등가성 방법론 자체가 새 서비스 시장을 만든다. 셋째, 양쪽 시장에 상장한 대기업이다. 호환이 이뤄지면 이들이 가장 크게 절감한다. 패자는 둘이다. 첫째, 독자 기준을 고집한 나라의 발행자다.

자국 기준이 아무리 정교해도 등가성 지도에 올라가지 못하면 국제 자금이 접근하지 못한다. 둘째, 국내 시장만 보는 중소 발행자다. 등가성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인증 요건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상승분은 규모가 작을수록 무겁다. 국가 평가 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승패가 있다.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 지금의 국가 점수 체계는 경기 위축이나 무역 축소로 배출이 줄어도 환경 점수를 올려 준다. 이것은 개선과 위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국제 투자 판단에 쓰이는 점수로서는 결함이다.

③ **한국 적용.** 우선순위는 이렇다. 첫째, 분류체계 항목별 대조표를 공개 문서로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내 인증기관·회계법인·연구기관이 먼저 만들어 공개해도 협상에 쓰인다. 둘째, 이중 공시 부담 목록이다. 유럽과 한국 양쪽 의무를 지는 기업이 항목 차이를 실측해 산업협회 단위로 모으면 그 자체가 협상 자료가 된다. 셋째, 국가 점수의 개선 지렛대를 다시 고르는 일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세계적으로 둔화한 국면에서는 물 관리, 생물다양성, 순환 지표의 개선이 상대 순위를 더 크게 움직인다. 이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국제 평가에서 더 많이 인정받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뜻이다. 넷째, 국내 공공기관의 자기 보고다. 감독기관·정책금융기관·공공기관이 유럽 기준 구조로 자기 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 보면, 민간에 요구할 기준의 현실성이 처음으로 검증된다.

④ **함정.** 첫째, 등가성을 완화로 오해하는 것이다. 등가성은 낮은 기준을 인정해 주는 장치라 아니라 다른 구조를 같은 결과로 환산하는 장치이며, 대개 환산 과정에서 요구 수준은 올라간다. 둘째, 호환을 기술 문제로만 보는 것이다. 공시 항목의 호환은 결국 무엇을 중요한 정보로 볼 것인가라는 정치적 선택이고, 그 선택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는 나중에 자기 산업 구조에 불리한 항목을 떠안는다. 셋째, 국가 점수를 성적표로 읽는 것이다. 이 점수는 국제 투자자의 위험 판단 도구이지 정책 평가가 아니며, 무역 축소로 배출이 줄어도 점수가 오르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넷째, 감독기구의 자기 보고를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간접 배출을 재생전력 조달로 없애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할 수 있고, 진짜 시험은 직원 이동과 가치사슬 배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된다.

이탈리아 감독기구가 그 부분을 남은 과제로 명시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등가성 논의를 대기업의 일로 미루는 습관이다. 분류체계 등가성이 정해지면 가장 먼저 값이 달라지는 것은 대형 발행자의 채권이 아니라 그 공급망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납품 조건이다. 유럽 발행자가 자기 채권의 녹색 인증을 유지하려면 조달처의 활동이 분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을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는 국내 2·3차 협력사까지 내려온다. 지금 국내 산업협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준비는 자기 업종의 대표 활동 다섯 개를 골라 유럽과 한국 분류체계의 판정 기준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다. 이 표는 등가성이 인정되면 협상 자료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회원사가 이중 증빙을 준비할 시간표가 된다.

출처: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08\) — ESG round-up: IIGCC calls for closer EU-UK interoperability on disclosures](#) ·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08\) — ESG round-up: CBI picks Australia to pilot taxonomy equivalence methodology](#) · [ESG News \(이탈리아, 2026-08\) — Consob pubblica il primo Rapporto di sostenibilità](#) · [ESG News \(이탈리아, 2026-08\) — Ranking ESG per paese: secondo i dati Robeco la Danimarca è al primo posto](#)

02 현장 들여다보기 — 세계의 임팩트 현장

2030까지 네 해, 무엇을 진척이라 부를지가 갈라졌다

유럽연합 통계기구가 열 번째 지속가능발전 진척 보고서를 냈다. 102개 지표로 대체로 2019년과 2024년 또는 2025년을 비교한 결과, 17개 목표 중 다섯에서 뚜렷한 진척이 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불평등 완화, 성평등, 양질의 교육이다. 아홉 개 목표는 완만하게 나아졌고 그중에서는 산업·혁신·인프라와 기아 종식이 투자와 혁신, 농업 생산성 증가에 힘입어 눈에 띄었다.

문제는 나머지가. 목표를 위한 협력 항목은 사실상 정체했다. 제도 역량과 국제 협력이 느려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항목에서는 후퇴가 있었다. 육상 생태계와 깨끗한 물·위생이다. 생물다양성 상실, 가뭄 심화, 수질 악화가 유럽 지속가능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경제·사회 지표는 계속 나아지는데 생태계의 회복력과 직결된 환경 항목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약이다.

같은 주 국제 비영리 네트워크 하나가 담수 보전의 진척을 재기 위한 37개 결과 지표를 개발해 첫 측정값을 내놨다. 결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달성 속도에 올라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었다. 서른일곱 개 중 영이다. 두 자료를 겹쳐 보면 그림이 분명해진다. 통계기구는 물 항목이 후퇴했다고 말했고, 새 지표 체계는 후퇴의 정도를 더 정밀하게 보여줬다. 목표까지 네 해가 남은 시점에 물은 지속가능발전 의제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지는 간극이 됐다.

세 번째 자료는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미국의 임팩트 투자 전문 매체에 실린 글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전체 세부목표의 약 35%만 궤도에 올라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진척을 앞당길 투자처로 지금 목록에 없는 항목 하나를 제안한다. 부모와 돌봄자의 웰빙이다. 세계적으로 부모와 돌봄자는

정신건강 악화, 서비스 배제, 돌봄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를 겪고 다른 성인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보고한다. 그런데 자국의 부모 웰빙 지원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정부는 26%에 그친다.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서비스가 파편화돼 사업이 규모를 키우기 어렵고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필자들은 부모가 잘 살면 아이가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성인으로 자라고 지역사회가 강해지며 경제가 움직인다는 경로를 들어, 건강·교육·경제성장·평화로운 사회 네 목표가 동시에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 자료는 스페인에서 나왔다. 제3섹터 플랫폼이 기후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국가협약에 가입하면서, 기후 적응과 대응 정책에 사회적 관점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폭염·홍수·산불의 영향은 예방하고 견디고 회복할 자원이 적은 사람들에게 불균형하게 떨어지므로, 적응 전략이 취약계층 보호를 권리 기반으로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태 전환이 기존 불평등을 넓힌다는 것이다.

한국 시사점 — 국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대체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공공기관 보고서의 아이콘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매핑 표다. 둘 다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나빠졌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이번 자료들이 주는 실무 과제는 네 가지다. 첫째, 후퇴 항목을 명시하는 관행이다. 유럽 보고서의 가치는 17개 중 다섯이 좋아지고 둘이 나빠졌다고 방향을 표시한 데 있다. 국내 기관이 자기 보고서에서 후퇴 항목을 한 줄이라도 명시하기 시작하면 그 보고서는 즉시 다른 문서가 된다. 이것은 예산도 승인도 필요 없는 일이다. 둘째, 물이다.

국내 논의에서 물은 대체로 가뭄과 홍수라는 재난 프레임에 머물러 있고 수질·유역 생태·산업 취수라는 지속가능성 프레임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서른일곱 개 지표 중 궤도에 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는 국내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물 관련 지표를 만들어 두는 기관이 앞으로 몇 년간 발언권을 갖는다. 셋째, 부모와 돌봄자 영역이다. 국내 임팩트 투자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청년·고령·장애 영역에 몰려 있고 양육자 자체를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드물다. 저출생 대응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는 나라에서 이 공백은 오히려 기회다. 넷째, 적응과 사회정책의 결합이다.

국내에서도 기후 적응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취약계층 보호가 별도 장으로 붙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스페인 제3섹터가 요구한 것은 별도 장이 아니라 적응 정책의 설계 원리 자체에 사회적 관점을 넣으라는 것이었다. 다섯째, 목표 연도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2030년이 지나면 지금의 목표 체계는 성패와 무관하게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판의 지표를 누가 설계하는가는 이미 지금부터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담당하는 기관과 연구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10년의 목표 체계도 남이 만든 표를 번역하는 일로 시작하게 된다. 이 요구가 국내 계획 문서의 구조를 바꾸기까지는 12~24개월로 본다.



심층 — ① 왜 중요한가 ② 승자와 패자 ③ 한국 적용 ④ 함정

① **왜 중요한가.** 목표 연도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다. 달성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순간 판정 기준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다. 이번 주 네 자료는 그 싸움의 네 갈래를 보여준다. 첫째는 정밀화다. 담수 지표 서른일곱 개는 물이 나빠졌다는 진술을

서른일곱 개의 검증 가능한 명제로 바꾼다. 둘째는 확장이다. 부모 웰빙 제안은 목표 달성률이 35%인 상황에서 지렛대가 큰 미등록 투자처를 목록에 넣자는 요구다.

셋째는 재해석이다. 스페인 제3섹터의 요구는 적응이라는 기술적 의제를 권리 의제로 다시 읽자는 제안이다. 넷째는 방향 표시다. 유럽 통계기구는 진척과 후퇴를 나눠 적었다. 이 넷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필요에서 나온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자원을 어디에 넣을지 결정해야 하고, 결정하려면 무엇이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② **승자와 패자.** 승자는 지표를 만드는 쪽이다. 담수 37지표를 만든 네트워크는 앞으로 몇 년간 물 관련 자금 배분의 언어를 진다. 임팩트 투자 영역에서 이것은 반복돼 온 규칙이다. 측정 체계를 먼저 만든 조직이 그 영역의 자본을 안내한다. 두 번째 승자는 후퇴 항목에 서 있는 조직이다. 생물다양성, 수질, 유역 생태를 다뤄 온 단체와 기업은 지금까지 기후 감축의 그늘에 있었는데 후퇴가 공식 문서에 적히면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한다.

패자는 진척 항목에 있는 조직이다. 역설적이지만 좋아지고 있다고 판정된 영역은 추가 자원을 얻기 어렵다. 유럽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이 진척으로 분류된 것은 그 영역 단체들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또 하나의 패자는 목록에 없는 의제다. 부모 웰빙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국내로 옮기면 문화 접근성이나 지역 돌봄 인프라가 비슷한 처지다. 목록에 이름이 없으면 성과가 좋아도 계상되지 않는다.

③ **한국 적용.** 다섯 갈래다. 첫째, 자기 조직의 목표 대응표에 방향 표시를 넣는 일이다. 아이콘 옆에 개선·정체·후퇴 세 글자를 붙이는 작업은 이번 달에 끝낼 수 있다. 둘째, 물 지표의 국내판을 만들 조직을 찾는 일이다. 유역 단위 데이터는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이를 결과 지표로 재구성한 조직이 아직 없다. 셋째, 양육자 대상 임팩트 사업의 설계다. 국내에는 돌봄 서비스는 많지만 돌봄자 자신의 건강과 소득 안정성을 성과로 삼는 사업이 드물다. 넷째, 적응 계획의 사회 조항 검토다. 지자체 기후 적응 계획을 열어 취약계층이 별도 장에만 등장하는지, 아니면 사업 선정 기준과 예산 배분 원리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다섯째, 후퇴를 말할 수 있는 조직 문화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

④ **함정.** 첫째, 지표를 늘리는 일이 개선을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담수 37지표의 첫 측정 결과가 전부 궤도 밖이었다는 사실은 측정이 개선의 시작일 뿐임을 보여준다. 지표를 만든 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그 지표는 실패의 기록 장치가 된다. 둘째, 목록 확장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 웰빙 제안은 설득력이 있지만, 목표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투자처를 몰라서가 아니라 재원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라면 목록을 늘리는 일은 자원을 더 얇게 펼 뿐이다. 셋째, 진척 항목의 착시다.

유럽에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이 진척으로 분류됐는데, 같은 기간 처녀 원료 사용은 세계적으로 계속 늘었다. 지표가 좋아진 것과 실물이 좋아진 것은 다르며, 특히 소비 기반 지표는 생산을 국외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개선된다. 넷째, 사회적 관점을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스페인 제3섹터의 요구는 지원금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응 사업의 입지와 순서를 정할 때 누가 먼저 보호받는지를 기준에 넣으라는 것이었다. 다섯째, 남은 시간을 이유로 목표를

낮추는 논리다. 달성률이 35%라는 사실은 목표가 과했다는 증거로도, 이행이 부족했다는 증거로도 쓰일 수 있고 실제로 두 해석이 이미 경쟁하고 있다.

임팩트 부문이 조심할 것은 목표 하향 논의에 반대만 하다가 판정 기준 설계에서 빠지는 일이다. 목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표의 정당성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 항목을 계속 공개적으로 계측해 하향이 곧 포기로 읽히게 만드는 것이다. 여섯째, 국내에서 흔한 함정으로 국제 목표를 국내 지표에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 있다. 유럽에서 후퇴로 판정된 항목이 한국에서도 후퇴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확인하지 않은 채 옮기면 실제 취약 지점을 놓친다.

출처: ESG News (이탈리아, 2026-08) — Agenda 2030, l'UE migliora su lavoro e inclusione sociale, ma arretra su biodiversità e risorse idriche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システムズ・チェンジ・ラボ、水課題で37指標開発。望ましい進捗はゼロ。状況悪化 · ImpactAlpha (미국, 2026-07) — The SDGs are off track: Investing in parental well-being could accelerate progress · Diario Responsable (스페인, 2026-08) — El Tercer Sector reclama que la acción climática sitúe a las personas vulnerables en el centro

녹색의 값을 누가 치르는가 — 전환에 필요한 광물이 만드는 새 부채

네덜란드의 임팩트 투자 전문 매체가 임팩트 투자자들에게 정면으로 물었다. 핵심 광물과 희토류는 넷제로 전환에 없어서는 안 된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수력 설비, 전기차와 에너지저장 배터리, 그리고 전력망의 뼈대가 전부 이 물질들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채굴과 가공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쓰고 환경을 파괴하며 화학적으로 위험하다. 2024년 한 해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나온 유독 폐기물은 약 7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유엔 산하 연구기관의 계산으로 쓰레기 수거차 5,900만 대를 채울 양이다. 채굴은 또한 사회 불안과 연결돼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분쟁이 잦은 지역에서 인권 침해 주장이 늘고 있다.

규모는 더 커진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용 배터리 수요만 맞추려 해도 2035년까지 흑연·리튬·니켈·코발트 광산이 400개 가까이 새로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다. 매체가 만난 투자자들의 대응은 구분에서 시작한다. 한 순환 바이오경제 펀드의 투자 담당자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저장·최종 사용을 나눠 보자고 제안했다. 생산 쪽은 기술 돌파가 일어나면 오늘의 원료 의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배터리·전기모터·전력전자·전력망은 앞으로도 상당한 물질을 계속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 필요를 완전히 없애는 시나리오는 현실에 없으므로, 목표는 책임 있는 조달과 재활용 개선, 자원 효율 향상으로 영향을 줄이는 쪽이 된다.

같은 주 자본의 방향을 보여주는 숫자가 나왔다. 한 유럽계 에너지 인프라 운용사가 성장시장 전용 청정에너지 인프라 펀드의 최종 모집을 30억 달러로 마쳤다. 2023년 출범한 이 펀드는 동유럽·아시아·중남미의 열다섯 개 시장을 겨냥하는데 인도·베트남·필리핀·멕시코·남아공이 포함된다. 높은 경제·인구 성장과 커지는 중산층을 기준으로 고른 시장이다. 규모는 전작의 세 배다. 2019년 10억 달러로 마감한 1호 펀드는 인도와 남아공에서 50개가 넘는 사업으로 약 8.7기가와트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2호는 이미 아홉 건에 16억 달러를 약정했는데 칠레 최대 규모의 단독 배터리 사업, 멕시코 최초의 대규모 태양광·배터리 저장 사업, 루마니아 최대급 재생에너지 투자가 들어 있다. 세 번째 장면은 수소다. 독일의 대형 전기·부품 기업과 알제리 국영 석유가스 기업이 7월 17일 그린수소 공동 개발 기회를 찾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서명은 알제리 대통령의 독일 공식 방문 중에 이뤄졌다. 두 회사는 수전해 장치 제조와 수소 생산을 포함해 알제리에서의 그린수소 개발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한다. 유럽이 쓸 수소를 북아프리카에서 만드는 구도가 국가 정상 외교 위에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네 번째 장면은 자원이 나오는 쪽의 정치다. 브라질의 한 연구소가 대통령 후보들과 주지사, 상원·하원, 주의회에 아마존의 산림파괴와 환경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여섯 개 지침을 보냈다. 핵심 주장은 누가 정권을 잡든 환경 거버넌스의 구조적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환경정책을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 지난 4년의 제도 재편이 되돌려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소는 2023년부터 2026년 사이의 성과가 개별 사업보다는 복잡한 공공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의 능력에서 나왔다고 평가하면서, 부처와 연방기관과 주·시 사이의 상시 조율 장치를 강화하고 환경·경제·토지·인프라·공공안전 정책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지침은 지휘통제 방식에서 불법 경제에 대응하는 체계적 전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한국 시사점 — 한국은 이 구도에서 순수한 수요자다. 배터리·전자·자동차 산업이 핵심 광물의 세계 수요를 밀어 올리는 축에 있고, 수소도 상당 부분을 해외 생산에 기대게 된다. 실무 과제는 다섯이다. 첫째, 조달 실사에 폐기물과 지역사회 항목을 넣는 일이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는 대체로 노동과 분쟁광물 인증에 맞춰져 있고 가공 단계의 유독 폐기물 처리는 항목에 없는 경우가 많다. 희토류 가공 폐기물이 이번 주 자료의 핵심 숫자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칸은 곧 채워야 한다. 둘째, 재활용을 조달 전략으로 다루는 일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이 국내에서는 환경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자료의 논리에서 그것은 원료 안보 사업이다. 분류가 바뀌면 투자 심사 기준과 인허가 우선순위가 바뀐다.

셋째, 성장시장 펀드의 명단을 읽는 일이다. 인도·베트남·필리핀·멕시코·남아공은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와 상당 부분 겹친다. 국제 자본이 그곳의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몇 년 뒤 그 지역의 전력 조달 조건과 재생전력 구매 계약 환경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넷째, 수소 조달 계약의 사회 조항이다. 북아프리카 수소는 물을 많이 쓰는 지역에서 물로 만드는 연료라 지역사회와의 갈등 소지가 크다. 계약 단계에서 취수 유역과 지역 편익 배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프로젝트 위험으로 돌아온다. 다섯째,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정책 구조에 대한 관심이다. 브라질 연구소의 요구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다. 이 논의가 국내 조달·투자 실무에 닿기까지는 12~24개월로 보지만, 첫째와 둘째는 지금 분기의 일이다.



심층 — ① 왜 중요한가 ② 승자와 패자 ③ 한국 적용 ④ 함정

① **왜 중요한가.** 임팩트 투자의 오래된 원칙 중에 중대한 해악 금지가 있다.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펀드라도 다른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핵심 광물은 이 원칙이 원리적으로 충돌하는 자리다. 넷제로에 기여하려면 광물이 필요하고, 광물을 캐면 물과 토양과 지역사회가 상한다. 이번 주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충돌이 이제 회피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생산과 저장·최종 사용을 나누자는 제안이 그 예다.

생산 쪽은 기술 대체 가능성이 있으니 장기 관점에서 낙관할 수 있고, 저장과 전력망은 대체가 불가능하니 조달·재활용·효율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 구분은 실무적으로 강력하다. 어느 영역에서 기술 전환을 기다리고 어느 영역에서 지금 당장 공급망을 고쳐야 하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알려주듯 자본은 이미 움직였다. 성장시장 인프라 펀드가 3년 만에 규모를 세 배로 키운 것은, 전환의 물리적 설비가 남반구에 지어진다는 뜻이다.

② **승자와 패자.** 승자는 넷이다. 첫째, 재활용과 도시광산 사업자다. 광물 수요가 400개 신규 광산 규모로 예측되는 순간 재활용의 경제성 논쟁은 끝난다. 둘째, 성장시장 인프라 운용사다. 셋째, 자원 보유국의 협상력이다. 알제리가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 수소 각서를 성사시킨 것은 자원국이 원료 판매자가 아니라 설비 유치자로 위치를 옮기는 방식이다. 넷째, 추적 기술이다.

광물의 출처와 가공 조건을 증명하는 데이터 서비스가 조달 계약의 필수 항목이 된다. 패자는 셋이다. 첫째, 원료를 팔고 끝내는 자원국이다. 가공과 설비가 현지에 남지 않으면 환경 부담만 남는다. 둘째, 조달 실사를 인증서 확보로 대체해 온 제조기업이다. 셋째, 환경 거버넌스가 정권마다 흔들리는 나라의 산업이다. 브라질 연구소가 정책의 국가화를 요구한 이유가 이것인데, 투자자는 규제의 강도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에 값을 매기기 때문이다.

③ **한국 적용.** 국내 실무자가 지금 손댈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다. 첫째, 공급망 실사 항목표에 가공 폐기물과 취수 유역 두 칸을 추가한다. 이것은 시스템 교체 없이 문서 한 장으로 가능하다. 둘째, 사용후 배터리·전자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분류를 원료 안보 사업으로 바꿔 투자심의 기준을 다시 쓴다. 셋째, 해외 생산기지의 재생전력 조달 계획을 성장시장 인프라 투자 지도와 겹쳐 본다. 국제 자본이 들어가는 지역과 우리 공장이 있는 지역이 겹치면 재생전력 구매 계약의 조건이 몇 년 안에 좋아지고, 겹치지 않으면 나빠진다. 넷째, 수소 도입 계약 표준안에 지역 편익 조항을 넣는 논의를 시작한다. 국내에서 이 논의는 아직 가격과 물량 중심이다.

④ **함정.** 첫째, 광물 문제를 조달 회피로 푸는 방식이다. 문제 있는 산지를 명단에서 빼면 자사 위험은 줄지만 그 광물은 다른 구매자에게 갈 뿐이고 현지 상황은 나빠지기도 한다. 임팩트 관점의 답은 배제가 아니라 조건부 구매다. 둘째, 재활용의 과대평가다. 지금 재활용으로 회수 가능한 물량은 앞으로 필요한 물량에 한참 못 미치고, 특히 신규 수요가 급증하는 국면에서는 회수 가능한 폐기물 자체가 아직 시장에 없다. 셋째, 남반구 인프라 투자를 자동으로 임팩트로 계상하는 습관이다.

대규모 태양광과 배터리가 지어진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이 좋아지지는 않으며, 전력이 산업단지지만 흐르는 구조인지 지역 배전망에 연결되는지가 갈림길이다. 넷째, 자원국 정치를 위험 요인으로만 읽는 것이다. 브라질 사례가 보여주듯 자원국 시민사회는 지금 규제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는 장기 투자자의 이해와 방향이 같다. 이들을 위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제도 안정화의 동맹으로 보는 편이 실제로 이익에 부합한다. 다섯째, 시간의 함정이다. 광산 하나가 인허가부터 생산까지 가는 데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전환 목표는 2030년과 2035년에 몰려 있다.

이 시차는 두 가지 결과를 만든다. 하나는 기존 광산의 증산 압력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환경 기준이 느슨한 지역이 먼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즉 조달 기준을 높이는 일과 공급을

늘리는 일이 단기적으로는 충돌한다. 이 충돌을 인정하지 않는 조달 정책은 실무에서 지켜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기준은 기록만 남긴다. 현실적인 답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 충족까지의 이행 기간과 그 기간의 개선 의무를 계약에 명시하는 조건부 구매이며, 이것이 임팩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보다 실제로 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이다.

출처: Impact Investor (네덜란드, 2026-08) — Critical minerals: Net zero's dirty dilemma · ESG Today (미국, 2026-08) — CIP Raises \$3 Billion for Growth Markets-Focused Clean Energy Infrastructure Fund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ボッシュとソナトラック、グリーン水素開発で覚書。大統領訪独を機に · O Globo (브라질, 2026-08) — Instituto Igarapé entrega a candidatos 6 diretrizes para controlar desmatamento e enfrentar crime ambiental na Amazônia

순환은 고리가 끊기고 지표가 틀렸다 — 그리고 그 노하우는 남쪽에 있다

네덜란드 섬유 부문의 기업과 협회 스물다섯 곳이 모인 협의체가 정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고 내각이 답을 내놨다. 이 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위기의식이었다. 네덜란드는 섬유의 분리수거와 선별, 재활용에서 유럽 선두에 있는데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넷으로 정리된다. 첫째, 버려지는 섬유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품질은 계속 나빠진다. 초저가 패스트패션의 확산이 원인 중 하나다. 둘째, 유럽의 의무가 폐기물 기본지침 개정과 곧 시행될 지속가능 제품 생태설계 규정으로 계속 강화되는데, 그 내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어렵다.

셋째, 선별과 재활용 준비, 재활용의 수익모델이 압박받고 있다. 넷째, 사슬의 협력이 아직 최적이 아니다. 수거자와 선별자와 재활용자와 생산자는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하는데도 각자의 필요를 충분히 맞추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의 결론은 단호하다.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인프라가 사라지고, 그러면 정책 목표와 순환 야망이 함께 위험해진다. 정부에 넘긴 스무 개 조언 중 가장 앞에 놓인 것은 수요 자극이다. 유럽산 소비후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생태설계 규정에 의무로 넣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생산자가 재생 소재를 사기 쉬워지고 재활용업체의 판로가 생긴다.

같은 날 나온 두 번째 소식이 협력의 어려움을 실물로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두 생산자책임기구가 1년 넘게 세 번째 기구와 광범위한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동등한 조건에서는 현재로선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세 조직은 협력 틀에 관해 상당히 진전된 합의문까지 만들어 두었는데 한쪽의 방향 전환으로 공동 경로가 멈췄다. 두 기구는 곧바로 둘만의 협약을 맺고 소비자 캠페인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이 내놓은 원칙 한 줄이 이 상황을 요약한다. 야망에서는 경쟁하고 실행에서는 협력한다. 캠페인은 수명 연장을 우선하고 수명이 끝난 제품은 올바른 수거함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를 담는다.

세 번째 자료는 지표 쪽의 문제다. 데이터센터의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는 지금 업계 표준으로 쓰이는 전력효율지표가 너무 거칠다고 지적한다. 냉각과 전력 공급을 뒤섞고, 서버 팬의 소비와 변압 손실을 정보기술 에너지로 잘못 귀속시킨다. 무엇보다 이 지표는 연산이 아니라 인프라의 효율을 재는데, 인프라 효율은 이미 훌륭한 수준인 반면 연산 에너지는 폭증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더 나은 체계는 연산

효율과 변환 효율, 냉각 부하를 나눠 재는 것이다. 상충 관계도 정리했다. 현장에서 물을 쓰면 냉각 에너지가 줄고 그러면 발전 단계에서 상류로 쓰이는 물도 줄어드는데, 이 계산은 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폐열 회수도 마찬가지다.

회수한 양이 아니라 그 회수로 회피한 에너지를 재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자료는 방향을 뒤집는다. 프랑스어권의 한 연구자는 남반구 여러 나라에서 순환경제로 불리는 실천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말한다. 세네갈 파티크에서는 오랫동안 값을 인정받지 못하던 덤브라는 열매를 여성과 청년들이 강화 밀가루와 기름, 사료, 비료로 바꿔 왔다. 출발점은 순환경제 전략이 아니라 영양실조 대응과 소득 창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쓰는 일이었다. 연구자들은 제도가 설계한 처방된 순환성과 필요에서 태어난 살아진 순환성을 구분하자고 제안한다. 산업국에서 순환경제는 선별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생산자책임 정책과 결부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그런 형태의 전환은 아직 제한적이고 처녀 원료 사용은 계속 늘고 있다.

한국 시사점 — 국내 순환경제 논의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는 고리를 지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를 고치는 일이다. 첫째, 선별과 재활용 사업자의 수익모델을 정책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폐섬유·폐플라스틱의 수거량은 늘지만 품질은 나빠지고 있고, 그 부담은 중간 사업자가 진다. 네덜란드가 경고한 것은 규제 목표를 높이는 사이에 그 목표를 실행할 설비와 회사가 먼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둘째,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이다. 수요를 만들지 않으면 재활용 사업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재활용 목표가 대체로 수거율과 처리율로 표시되고 사용률로 표시되지 않는다. 셋째, 생산자책임 기구들의 협력 실패 사례는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내에도 품목별 공제조합과 대형 기구가 여럿 있고 소비자 대상 메시지가 제각각이다. 야망에서는 경쟁하고 실행에서는 협력한다는 원칙은 오늘 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문장이다. 넷째, 데이터센터 지표다. 국내 데이터센터 정책과 기업 보고서는 거의 전부 전력효율지표 하나로 성과를 말하는데, 그 지표가 연산 효율을 재지 않는다는 지적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지금 결정적이다. 다섯째, 순환의 원형을 남반구에서 배우자는 제안은 국내 맥락에서도 유효하다. 재래시장의 수선업, 중고 유통, 부품 재사용 같은 실천은 이미 존재하는데 정책 문서에서는 순환경제로 계상되지 않는다. 이 관점 전환이 국내 정책 언어에 닿기까지는 18~30개월로 보지만, 둘째와 셋째는 이번 분기의 일이다.



심층 — ① 왜 중요한가 ② 승자와 패자 ③ 한국 적용 ④ 함정

① **왜 중요한가.** 순환경제는 지금 세 겹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첫째는 배관의 문제다. 순환은 여러 사업자가 사슬로 연결돼야 성립하는데, 그중 하나만 수익이 안 나면 전체가 멈춘다. 네덜란드 협의체가 결정적 인프라의 소실을 경고한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 소실은 조용히 일어난다. 재활용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아도 뉴스가 되지 않고, 몇 년 뒤 정책 목표를 못 맞출 때에야 원인이 드러난다. 둘째는 조율의 문제다.

생산자책임 기구들이 1년 넘게 협의하고도 동등한 조건을 못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도가 있어도 실행 주체 사이의 권한 배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계측의 문제다. 데이터센터 보고서의 지적은 순환 논의 전반에 적용된다. 우리가 재고 있는 것이 정말 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기 쉬운 것인지. 폐열 회수량을 세는 것과 회피한 에너지를 세는 것의 차이는 순환 성과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② **승자와 패자.** 승자는 셋이다. 첫째, 재생원료 의무 비율이 도입될 때 이미 유럽산 재생 소재를 확보한 생산자다. 둘째, 사슬 전체를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수직 통합 기업이다. 조율 실패가 반복되면 시장의 답은 통합으로 기운다. 셋째, 새 지표를 만드는 쪽이다. 데이터센터 효율 지표가 연산 효율과 냉각 부하로 분해되면 그 계측을 제공하는 사업이 생긴다. 패자는 셋이다. 첫째, 사슬 중간의 독립 사업자다.

선별과 재활용 준비는 부가가치가 낮고 규제 불확실성에 가장 취약한 구간이며, 여기가 무너지면 앞뒤가 모두 멈춘다. 둘째, 초저가 패스트패션에 의존한 유통이다. 수거 섬유의 품질 저하가 정책 문서에 원인으로 적히기 시작하면 다음은 부담금이다. 셋째, 지표 하나로 성과를 말해 온 데이터센터 사업자다. 애매한 자리에 남반구의 실천이 있다. 이들은 실제로 순환적이지만 제도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아 자금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③ **한국 적용.** 네 갈래다. 첫째, 중간 사업자 실태 조사다. 국내 선별·재활용 사업자의 수익 구조와 폐업 추이를 실측한 자료가 공개된 형태로 거의 없다. 이 자료를 만드는 조직이 앞으로 순환 정책 논의의 근거를 갖는다. 둘째, 목표 지표의 전환이다. 수거율에서 사용률로 지표를 옮기는 것은 정책 문서 한 줄의 문제이면서 산업 구조 전체의 문제다. 셋째, 생산자책임 기구 간 공동 캠페인이다. 경쟁하는 조직들이 소비자 메시지만이라도 통일하는 것은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조치다. 넷째, 데이터센터 보고 지표의 분해다. 국내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연산 효율과 냉각 부하를 나눠 보고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국내 기준의 초안이 된다.

④ **함정.** 첫째, 규제 강화가 곧 순환 강화라는 착각이다. 네덜란드 사례가 정확히 반대를 보여준다. 규제의 방향이 옳아도 내용이 불확실하면 투자가 멈추고, 투자가 멈추면 설비가 사라진다. 규제 설계에서 확정 시점을 명시하는 일은 강도를 정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둘째, 소비자 캠페인으로 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다. 소비자 행동은 사슬의 마지막 고리이고, 앞 고리의 수익모델이 없으면 잘 분리배출된 섬유도 갈 곳이 없다. 셋째, 남반구의 실천을 낭만화하는 것이다. 살아진 순환성은 대개 빈곤과 인프라 부족의 산물이며, 그 안에는 위험한 노동과 건강 피해가 함께 있다. 배울 것은 형태가 아니라 원리, 즉 제약이 창의를 만든다는 점과 지역 자원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넷째, 지표 교체를 미루는 일이다.

잘못된 지표는 틀린 답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지표로 성과를 낸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교체를 점점 어렵게 만든다. 다섯째, 순환을 폐기물 부서의 일로 두는 배치다. 이번 자료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병목은 수거나 배출이 아니라 재생 소재를 사 줄 수요, 즉 구매와 제품 설계에 있었다. 재생원료 의무 비율이 첫 번째 조언으로 올라온 이유가 그것이다. 국내 기업에서 순환 담당이 환경안전 부서에 있고 구매와 상품기획이 그 논의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수거

실적을 내도 사슬은 완성되지 않는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지표 논의를 기술 문제로만 다루는 것이다. 지표가 연산 효율을 재기 시작하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연산으로 제공하는 설계가 성과가 되고, 그것은 시설 담당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만드는 쪽의 일이 된다.

출처: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08\) — Advies Textieltafel aan overheid: voorkom dat essentiële schakels voor circulaire transitie verdwijnen](#)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08\) — Bredere samenwerking ERP Nederland en Collectief Circulair Textiel momenteel niet haalbaar](#) · [arXiv \(미국, 2026-08\) — Circular Economy Synergies and Trade-offs in Data Centres](#) · [The Conversation \(프랑스어권, 2026-08\) — Gestion des déchets et économie circulaire : le savoir-faire se trouve au Sud](#)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한국은 적응을 법으로 먼저 받았다 — 그리고 측정은 숫자 밖으로 나가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8월 1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50년까지 가는 중장기 감축 경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은 것이 핵심이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눈여겨볼 것은 형식이다. 2035년 이후 목표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 같은 규제에는 각 구간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목표를 세우거나 바꿀 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국제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고,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에는 자연과학·공학·경제학·사회과학·보건·생태·법·정책 전문가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된 기후과학위원회가 설치된다. 같은 날 특위는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만들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틀 뒤인 8월 15일에는 농업 재해를 다루는 두 법의 개정 내용이 시행에 들어갔다. 재해보험법 쪽 변화가 특히 구체적이다. 폭염·집중호우·태풍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넘으면 그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지로 했다. 큰 재해를 겪은 농업인이 다음 해에 보험료 부담까지 떠안은 구조를 끊은 것이다. 손해평가 절차도 손봤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을 확대하고 정부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조사 근거를 만들었으며, 가입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배정된 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이 추가됐고,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국가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복구 지원의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에는 다시 심는 데 드는 비용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나기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앞의 꼭지에서 살핀 유럽의 움직임과 나란히 놓으면 대비가 선명해진다. 유럽은 적응의 값을 채권과 보험 상품으로 시장에 넘기고 있고, 한국은 같은 값을 법률과 공적 보험의 산정 규칙 안으로 끌어들었다.

실물 쪽에서는 자원 순환과 수소가 만나는 지점에서 사례가 하나 나왔다. 현대자동차가 7월 17일 청주에 폐기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까지 하는 그룹 최초의 자체 운영 통합 시설을 열었다. 2030년까지 하루 2톤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앞선 쪽지에서 다룬 구도, 즉 유럽이 쓸 수소를 북아프리카에서 만드는 방식과 견주면 성격이 다르다. 원료가 수입 재생전력이나 해외 담수가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기 때문이다.

측정 쪽에서는 국내 비영리 연구소 한 곳이 던진 질문이 눈에 띈다. 캠페인에 몇 명이 참여했고 콘텐츠가 몇 번 조회됐는지는 쉽게 확인되지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는지, 사회의 인식과 대화가 달라졌는지, 그것이 제도 변화로 이어졌는지는 하나의 숫자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내러티브 변화라는 개념을 빌려 측정의 영역을 네 단계로 정리한다. 어떤 이야기를 누구의 목소리로 만들고 있는가, 그 메시지가 만나려던 사람에게 실제로 닿았는가, 메시지를 접한 사람의 지식과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사회적 담론과 규범과 제도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핵심 문장은 도달했다는 것과 변화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사회 변화는 여러 조직과 활동가와 시민과 언론이 함께 만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입증하는 귀속보다 더 큰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기여에 주목하자는 관점이다. 함께 제시된 원칙은 넷이다. 변화를 겪는 사람과 지역사회에서 시작할 것,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도 주목할 것, 귀속보다 기여에 집중할 것, 그리고 평가 결과로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다르게 하고 무엇을 더 할지 판단해 다음 활동에 반영할 것.

한국 시사점 — 이번 주 한국 자료는 서로 다른 세 영역에서 왔지만 하나의 실무 과제로 모인다. 첫째, 법으로 들어온 적응을 조직의 계획에 옮기는 일이다. 목표가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되고 규제에는 하한이 적용된다는 구조는 기업 실무에 직접적이다. 배출권 할당과 감축 의무는 하한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정부 지원과 대외 평가는 상한을 향해 설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 시나리오의 설비 투자 계획을 나눠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농업재해 보험 개정은 농식품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과 임팩트 투자에 즉시 적용된다. 상위 10분위 초과 피해에 할증을 매기지 않는다는 규칙은 기후 위험이 큰 작목의 사업 계획서를 다시 쓰게 만들고, 이상고온과 그로 인한 병해충이 지원 대상이 된 것은 스마트팜과 시설 재배 투자의 회수 기간 계산을 바꾼다.

셋째, 폐기물 기반 수소는 지역 단위 임팩트 사업의 새 유형이다. 원료가 지역에서 나오고 설비가 지역에 서고 편익이 지역 교통에 남는 구조라, 해외 생산 수소가 갖지 못하는 지역 편익 논거를 처음부터 갖는다.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기업이 살펴볼 자리다. 넷째, 측정이다. 내러티브 변화의 네 단계는 국내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틀이다. 사업 보고서의 성과 항목을 도달과 사람의 변화로만 나눠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도달을 성과로 보고해 온 관행이 드러난다. 이 작업에는 예산도 외부 컨설팅도 필요 없다.



심층 — ① 왜 중요한가 ② 승자와 패자 ③ 한국 적용 ④ 함정

① **왜 중요한가.** 이번 호가 세계에서 관찰한 이동, 즉 판정석이 옮겨 앉는다는 흐름의 한국판이 이번 주 국내 자료에 그대로 들어 있다. 다만 방향이 다르다. 유럽에서는 적응의 값을 시장이 매기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법과 공적 보험이 먼저 매겼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 어렵고, 각각 다른 결과를 낳는다. 시장이 값을 매기면 값이 매겨진 위험만 다뤄지고 나머지는 방치되는 대신 자본이 빠르게 붙는다.

법이 값을 매기면 형평은 지켜지지만 재정 부담이 한곳에 쌓이고 민간 자본은 들어올 이유를 못 찾는다. 이번 개정의 세부에서 이 긴장이 보인다. 상위 10분위 초과 피해를 할증에서 빼는 조치는 형평의 관점에서 옳지만, 보험의 관점에서는 위험의 크기를 가격에서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그 차액은 결국 국가가 진다. 측정 쪽 자료가 같은 주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값을 누가 매기든 무엇을 성과로 셀 것인가라는 질문은 남고, 국내 비영리 부문은 지금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했다.

② **승자와 패자.** 승자는 셋이다. 첫째, 기후 위험 데이터를 가진 조직이다. 상위 10분위 판정과 이상고온 인정, 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전부 데이터 위에서만 작동한다. 농업 기상과 병해충 데이터를 다뤄 온 기관과 스타트업의 자리가 커진다. 둘째, 폐기물에서 자원을 만드는 지역 사업자다. 원료 확보 비용이 음수이거나 영에 가깝다는 구조적 장점은 수입 원료 기반 사업이 흉내 낼 수 없다. 셋째, 기여 관점의 측정을 먼저 도입한 비영리다.

정부와 기업의 성과 요구가 갈수록 정량화되는 국면에서, 자기 활동을 더 큰 변화 안에 위치시켜 설명할 수 있는 조직만이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값을 인정받는다. 패자는 둘이다. 첫째, 목표 범위의 하한만 보고 계획을 세우는 기업이다. 규제는 하한으로 오지만 조달과 투자 평가는 상한을 참조하게 되고, 그 격차가 몇 년 뒤 설비 투자 지연으로 나타난다. 둘째, 도달 지표만으로 성과를 보고해 온 조직이다. 측정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같은 활동이 갑자기 성과 없는 활동으로 보인다.

③ **한국 적용.** 다섯이다. 첫째, 감축 목표의 두 시나리오 계획이다. 하한 기준의 규제 대응 계획과 상한 기준의 투자·평가 대응 계획을 나눠 만든다. 둘째, 농식품 임팩트 사업의 재무 모델 재계산이다. 이상고온과 병해충이 국가 지원 대상이 되고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가 복구 지원 범위에 들어온 것은 사업 계획서의 손실 가정을 직접 바꾼다. 셋째, 지역 폐자원 기반 사업의 발굴이다.

폐기물에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 외에도 음식물·하수 슬러지·축분에서 에너지와 소재를 뽑는 사업이 같은 논리를 공유한다. 넷째, 성과 보고서의 항목 재배치다. 도달·사람의 변화·문화와 구조의 변화 세 칸으로 기존 지표를 재배치하는 작업은 이번 달에 끝낼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섯째,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기록하는 칸을 사업 결과보고서에 만드는 일이다. 이 칸이 없으면 계획 밖의 성과는 조직 안에서 사라진다.

④ **함정.** 첫째, 범위 목표를 유예로 읽는 것이다. 2035년 53~61%라는 범위는 낮은 쪽을 골라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 하한 아래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다는 바닥의 명시다. 둘째, 공적 보험의 확대를 위험 감소로 착각하는 것이다. 할증을 면제하면 농가의 부담은 줄지만 위험 자체는 그대로이고 그 값은 재정으로 이동한다. 임팩트 관점에서 다음 질문은 그 재정이 적응 투자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매년 피해 보상으로만 소진되는가다. 셋째, 폐기물 기반 사업의 원료 리스크다. 원료가 싼 이유는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인데,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개선되면 원료가 줄어든다.

순환이 잘될수록 사업이 어려워지는 구조를 처음부터 계약에 반영해 두어야 한다. 넷째, 측정 틀의 도입이 곧 측정의 개선은 아니라는 점이다. 내러티브 변화의 네 단계를 보고서 목차로만 쓰고 실제 데이터는 여전히 도달 숫자만 채운다면, 새 틀은 오히려 더 정교한 포장이 된다. 기여 관점의 핵심은 우리 활동이 없었다면 무엇이 달랐을지를 정직하게 적는 것이고, 그 답이 잘 모르겠다일 때 그렇게 적을 수 있어야 이 틀이 작동한다. 다섯째, 두 시계를 한 부서가 다 맡는 일이다.

법의 시계는 규제 대응이고 쉼법의 시계는 성과 설계인데, 국내 조직에서는 대개 같은 담당자가 둘을 겸한다. 규제 마감에 있는 일은 언제나 먼저 처리되므로 성과 언어를 만드는 작업은 매년 밀린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몇 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 여섯째, 적응 정보관리체계가 정보의 수집으로 끝날 위험이다. 체계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는 쌓이는데 그 데이터를 근거로 예산 배분 순서를 바꾸는 절차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취약지역 지원은 여전히 사후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사전 취약성 지표가 사후 피해 통계보다 앞서 쓰이도록 만드는 일이 이 법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른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08)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탄소중립법 개정,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시행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한국, 2026-08) — 숫자 너머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까?: 내러티브 변화에서 살펴보는 임팩트 측정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現代自動車、廃棄物からのFCV用水素生産施設開設。2030年までに日量2トンへ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일본 — 12년 전에 그린 2050년의 여름이 이미 왔다. 일본 기후 리더스 파트너십과 공영방송 계열사 등이 2014년에 만든 「2050년의 날씨예보」를 최신 과학에 맞춰 다시 만들어 무료로 공개했다. 다시 만든 이유가 그 자체로 자료다. 당시 2050년의 일로 상정했던 폭염, 예컨대 한여름 같은 더위가 추분 무렵까지 50일 넘게 이어지는 현상이 이미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기후 소통 자료의 갱신 주기가 12년에서 훨씬 짧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출처: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JCLPやNHK等、「2050年の天気予報 (Ver.2)」無料公開開始。
酷暑日が全国各地に

멕시코 — 지속가능 투자에 던져진 새 질문: 왜 남아야 하는가. 정치적 압력과 경직된 경기, 지정학 불안, 공급망 교란, 기업 지출에 대한 감시 강화가 겹치면서 지속가능성 예산이 더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다. 이제 묻는 것은 이 사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약속에 얼마나 맞는가가 아니라 가치가 어디 있는가, 즉 마진과 현금흐름과 위험과 회복력과 성장을 어떻게 바꾸는가다. 한 회계법인 조사에서 경영진의 72%가 자사

지속가능성 전략과 지표를 상세히 이해한다고 답했고 60%가 관련 위험과 기회를 재무 계획에 반영한다고 답했지만, 지속가능성이 재무 성과와 영업이익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한 정량화 방법으로 측정하는 곳은 19%에 그쳤다.

출처: [ExpokNews \(멕시코, 2026-08\) — La inversión en sostenibilidad enfrenta una nueva pregunta: ¿por qué debería quedarse?](#)

국제 — 환경 공시는 두꺼워졌는데 쓸모 있는 문장의 비율은 줄었다. 캐나다 규제당국에 제출된 광업기업 연차정보서류 5,238건에서 환경 관련 문장 15만 2,567개를 뽑아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을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구체성과 새로움, 그리고 전체 분량 대비 비율이라는 세 축으로 재보니 역설이 나타났다. 절대량으로 보면 구체적이고 새로운 문장이 늘었는데, 그 문장들이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내용 아래 점점 더 깊이 묻히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질 높은 공시를 내지만 이 전반적 패턴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출처: [Journal of Business Ethics \(국제, 2026-08\) — Accountable to Nature: Signal and Noise in Environmental Disclosure](#)

이탈리아 — 사회적경제 조직을 점검하는 서식이 확정됐다. 노동사회정책부가 8월 10일 시행령으로 제3섹터 등록 조직에 대한 감독에 쓸 세 가지 조서 양식을 확정했다. 정기 점검, 특별 점검, 그리고 조직을 찾을 수 없어 점검하지 못한 경우다. 정기 점검 조서가 다루는 항목이 구체적이다. 명칭과 법적 형태, 회원 구성, 정관 적합성, 공익 활동과 그 밖의 활동 수행, 비영리성, 재무제표, 직원총회 장부, 자원봉사자와 노동자, 재산, 기관 구성이다. 직전 3년간 총수입 6만 유로 이하인 소규모 조직에는 일부 항목만 보는 간소 절차가 유지된다.

출처: [Cantiere Terzo Settore \(이탈리아, 2026-08\) — Controlli sugli enti del Terzo settore, adottati i modelli di verbale](#)

프랑스 — 어두운 여름에도 다섯 가지는 앞으로 갔다. 한 지속가능 금융 전문 매체가 이번 여름의 좋은 소식 다섯을 골랐다. 화석연료 광고 규제, 브라질의 산림파괴 감소, 인공지능 규제의 진전 등이다. 나쁜 소식을 세는 관행에 익숙해진 부문에서 개선 사례를 목록으로 관리하는 편집 선택 자체가 참고할 만하다.

출처: [Novethic \(프랑스, 2026-08\) — Fin de la pub pour les énergies fossiles, déforestation, IA... 5 bonnes nouvelles à retenir sur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ciale cet été](#)

아르헨티나 — 지역관계와 지속가능성을 한 자리에 묶은 인사. 가스 수송 기업이 지역관계·지속가능성 총괄에 정치학 전공에 기업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임팩트 프로그램 운영, 공공·민간·사회 부문 이해관계자 관리에서 15년 넘게 경력을 쌓은 인물을 임명했다. 자리 이름 자체가 정보다. 인프라 기업에서 지역사회 관계와 지속가능성이 별개 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직무로 묶이는 흐름이다.

출처: [ComunicaRSE \(아르헨티나, 2026-08\) — TGN designó a Mariana Jourdan como jefa de Relaciones Comunitarias y Sostenibilidad](#)

독일 — 지속가능성이 경제를 무너뜨린다면,이라는 문장의 무게. 올 3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에너지 회의에서 독일 경제장관이 유럽연합의 2050년 기후목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경직된 목표는 스스로를 묶는 일이고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 집약 산업을 잃게 된다는 것, 2050년까지 5~10% 정도의 격차가 남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이번 호에서 다룬 여러 판정 기준의 재편이 기술 논쟁만이 아니라 산업 정책의 힘겨루기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 자료다.

출처: Die Welt (독일, 2026-03) — „Wenn Nachhaltigkeit Wirtschaft zum Einsturz bringt“: Reiche stellt EU-Klimaziel in den USA infrage

미국 — 데이터센터 시대의 전력회사를 투자자는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한 투자자 네트워크가 데이터센터 급증이 전력회사에 만드는 위험과 대응을 정리한 투자자용 안내서를 냈다.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한 곳이 수십만 킬로와트에서 수백만 킬로와트, 앞으로는 기가와트급 전력을 요구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미국 전력 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앞으로 더 빠르게 는다. 문제는 발전소의 실제 가동률이 정격 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계통 연계를 신청한 계획 중 실현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점이다. 전력회사는 거액의 발전·송전 투자를 요구받으면서도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설비가 놀게 되는 자리에 놓인다.

출처: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Ceres、データセンター時代の電力会社向け投資家ガイド発行。3つのリスク対応重視

일본 — 지자체 수의계약에서 스타트업을 쓰기 쉽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요건 가운데 하나를 완화해, 국가가 선정한 유망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자체가 활용하기 쉽게 했다. 조달은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가 가장 넘기 힘든 문턱인데, 인증 제도를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있는 선정 명단을 계약 절차와 연결한 접근이다.

출처: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政府、地方自治体の4号随契でJ-Startup採択企業の活用促進。手続緩和

국제 — 논물과 매립가스 크레딧이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 탄소 크레딧의 품질을 판정하는 국제 기구가 논에서 나오는 메탄과 매립가스를 다루는 방법론에 핵심 탄소 원칙 승인을 내줬다. 농업과 폐기물 부문의 크레딧은 측정과 추가성 입증에 어려워 품질 논란이 컸던 영역이라, 이 승인은 아시아 지역 농업 감축 사업의 자금 조달 조건에 직접 영향을 준다.

출처: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8) — ICVCM、水田メタンと埋立ガスのカーボנקレジットでCCPメソッドロジャー承認

네덜란드 — 놀이공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는 쪽부터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대형 테마파크가 음식물 폐기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얼마나 버려지는지 자동으로 인식해 기록하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도입했다. 대규모 식음 사업장에서 감축의 첫 단계가 조리법이나 메뉴가 아니라 계측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05 편집장의 글

① 판정석은 조용히 옮겨 앉는다

권력의 이동은 대개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이번 주에도 아무도 이제부터 우리가 판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광고심의위원회는 늘 하던 일, 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지를 판단했을 뿐이다. 다만 그 판단의 대상이 세제 광고가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 전환 계획이었을 뿐이다. 연기금은 늘 하던 일, 즉 위탁운용사에게 설문을 돌렸을 뿐이다. 다만 그 설문의 답이 앞으로 몇 년간 무엇이 중대한 과제인지를 정한다. 은행은 늘 하던 일, 즉 목표 진척을 보고했을 뿐이다. 다만 보고하는 김에 목표의 정의를 다시 그렸다. 이런 이동은 사후에만 보인다.

그래서 이 지면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이동에 이름을 붙여 두는 것이다. 이름이 있으면 다음에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알아볼 수 있다. 이번 호가 붙인 이름은 판정석의 이동이다. 무엇이 참인지를 정하던 자리가 규제기관과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값을 매길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고, 그 자리는 대개 시장의 안쪽이거나 소비자 접점이다. 한국의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함의는 하나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관의 승인을 받으려 애쓰고 있다면, 3년 뒤에도 그 기관이 승인의 권한을 갖고 있을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은 냉소가 아니라 실무다.

국내 조직들이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일 가운데 하나가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과 인증 취득이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운영 주체가 바뀌었거나 기준이 개정돼 예전 인증의 뜻이 달라졌다. 가입과 인증이 무의미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 노력의 결과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인증서에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발급 기관과 운명을 같이하고, 그 과정에서 만든 데이터와 절차에 남아 있다면 기관이 사라져도 조직에 남는다. 판정석이 옮겨 앉는 국면에서 살아남는 것은 승인이 아니라 승인을 받기 위해 만들었던 근거다. 그래서 이번 호의 실행 항목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새로 시작하랴가 아니라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 두라는 형태를 띤다.

② 값을 매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이번 호에서 가장 선명한 대비는 적응과 물 사이에 있다. 적응은 값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손실이 관측되고, 관측되면 보험료가 되고, 보험료가 되면 채권이 되기 때문이다. 재해채권 시장이 600억 달러를 넘었고 감독기관이 별도 항목을 만들었으며 은행이 산업별 손실 계수를 공표했다. 반면 물은 서른일곱 개 지표를 만들었는데 궤도에 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물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다. 물의 편익은 유역 단위로만 성립하고, 어느 유역에서 되돌린 물을 다른 유역의 취수와 상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출은 어디서 줄이든 총량으로 셈이 맞지만 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물에는 아직 시장이 서지 않는다. 이 대비가 알려주는 것은 값이 매겨지는 순서가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라 계산 가능성의 순서라는 사실이다. 임팩트 자본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계산이 쉬운 문제는 결국 일반 자본이 가져간다. 임팩트 자본이 자기 자리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아직 계산되지 않은 문제에 먼저 계산 체계를 세우는 일이며, 그 체계를 만든 조직이 나중에 그 영역의 자금 흐름을 안내한다. 담수 지표 서른일곱 개를 만든 네트워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국내 상황에 옮기면 질문은 더 구체적이 된다. 우리 영역에서 아직 값이 매겨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돌봄 노동의 질, 지역 상권의 관계 밀도, 문화 접근성의 격차, 양육자의 소진, 소규모 사업자의 기후 노출 같은 것들이 후보다. 이 항목들은 지금 어느 평가 체계에도 잘 잡히지 않고, 그래서 자본이 붙지 않으며, 자본이 붙지 않으니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다. 이 순환을 끊는 유일한 지점이 계측이다. 그리고 계측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큰 예산이 아니라 무엇을 셀지에 대한 합의와 몇 년간 같은 방식으로 세겠다는 지구력이다. 값을 매기는 자리가 옮겨 앉는다는 것은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곳도 있다는 뜻이고, 빈자리는 대개 먼저 앉는 쪽이 갖는다.

③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두 개의 시간

한국은 이번 주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계를 동시에 돌렸다. 하나는 법의 시계다. 감축 경로가 법률에 범위로 적혔고 적응과 회복력을 다루는 법이 함께 통과했으며 농업재해 보험의 산정 규칙이 바뀌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계는 빠르다. 다른 하나는 쉼법의 시계다.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 도달과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귀속과 기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이 국내 비영리 부문에서 이제 막 제기되고 있다. 이 시계는 느리다. 문제는 두 시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긴다. 법이 예산과 의무를 만들면 반드시 성과 보고가 따라오고, 그때 쓰이는 지표는 대체로 세기 쉬운 것들이다.

참여 인원, 설치 대수, 집행률이다. 쉼법의 시계가 법의 시계를 따라잡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간 기후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들어갈 자금은 도달만 세는 보고서 위에서 집행된다. 그래서 지금 국내 임팩트 부문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새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곧 대규모로 집행될 자금을 쓰일 성과 언어를 지금 만들어 두는 것이다. 이 작업에는 큰 예산이 들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며, 지금 시작한 조직만이 몇 년 뒤 그 언어의 주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세 가지면 충분하다. 첫째, 자기 영역에서 도달과 변화를 가르는 문장을 만든다.

몇 명이 왔는가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같은 표에 나란히 적기만 해도 절반은 된다. 둘째, 우리 활동이 없었다면 무엇이 달랐을지에 대한 답을 매 사업마다 한 문단으로 적어 둔다. 모르겠다는 답도 답이고, 그 답이 3년쯤 쌓이면 어떤 조건에서 우리 활동이 실제로 차이를 만들었는지가 보인다. 셋째, 계획에 없던 결과를 적는 칸을 만든다. 기후 적응 사업은 특히 예상 밖의 효과가 많은 영역이다. 그날막 하나가 상권의 체류 시간을 바꾸고 쉼터 한 곳이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접촉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적을 칸이 없으면 다음 사업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